

# 김영록 지사, 현안 해결·국고 확보 등 국회 ‘광폭행보’

### 여야 정책위의장·상임위원장 등 릴레이 면담 지원 요청 전남특별자치도·기회발전특구 조세 특례·SOC 증액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는 13일 국회에서 여야 정책위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을 잇따라 면담하고 전남특별자치도와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등 지역 현안 해결, 2025년 국비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추가 증액 등을 건의했다.

이날 김 지사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정태호 기획재정부 차관, 박지원·서미화 국회의원 등을 면담했다.

김 지사는 지역 현안을 설명하면서 “전남이 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한민국 핵심 성장축으로 당당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도민의 오랜 염원인 전남도 국립과 대학 설립과 관련, 그는 “정부 1도 1국립

대 정책 방향과 지역 상생·화합에 부합하면서 전체 도민의 건강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통합의대’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통합의대를 정부에 추천하면 정부에서 2026학년도 국립의대 신설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지방은 권한과 재정이 부족해 주도적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비교우위 산업의 권한을 확보해 지역 주도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겠다”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비수도권은 기업 유치와 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인구 소멸 위험지역 중심으로 기업 상속 공제 확대, 특구 근로자 소득세 감면 확대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13일 국회를 찾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신정훈 국회 행정위원장을 만나 주요 도정 현안 건의 및 2025년 국고현안사업 반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의당위성을 역설했다.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및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SOC·관광·해양 등 남해안 발전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고 중앙지방통합청 행정기관인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진상 규명 조사 기간 2년 연장 및 함께 신속한 희생자 유족 결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조속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 광주시·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 임미란 시의원 “광주 노동인권회관 건립 좌초 우려”

광주지역 노동자의 노동 인권 증진을 위해 건립을 추진 중인 노동인권회관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은 13일 노동일자리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인권회관 건립은 노·사·민·정 협약에 따라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첫 삽도 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2019년 노사상생도시 실현을 위해 노사민정과 공동으로 노동인권회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정 부담과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와의 기능 중복 등을 이유로 2022년부터 사업 시기 조정에 들



어갔다.

임미란 의원은 “2025년 본예산에도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사업 시기 조정에 들어간 이후 마땅한 대책이나 계획도 없어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선경 기자

### 강정일 도의원 “올해 유지비 73억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을”

전남도의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최근 전남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 비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이순신대교)는 2013년 준공 후 10년이 경과돼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 만료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이순신대교 유지관리 예산은 73

억원에 달한다. 재원은 도로 연장 비율에 따라 매년 전남도(33.3%), 여수시(42.7%), 광양시(24%)가 부담하고 있다.

강 의원은 “해상교량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순신대교는 여수국가산단과 광양국가산단 및 광양항 간 원활한 화물 수송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됐으며 국가산단 세금 또한 국세로 징수돼 국가로 귀속



되기 때문에 국도로 승격해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를 포함한 도내 특수교량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도 승격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재정 기자

## 여수 석유화학산단 위기 대응 5조6천억 투입

### 도,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추진

전남도가 석유화학산업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에 따른 위기에 처한 여수국가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5조6천480억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13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수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경쟁력 강화방안은 글로벌 석유화학 산업 재편과 위기 대응을 위한 석유화학산업 전환경·고부가 산업 재편,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조성, 산업 인프라 확충, 규제 개선 등 4개 분야 33개 사업(예산 5조6천480억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여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에 여수 국가산단 중심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한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가 산단의 생산활동 위축과 고용 불안정을

유발하고 지역 주민의 소비 감소와 지역 상권 위축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업·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 토론회에서는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전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 주중섭 의원, 문갑태 여수시의회 부의장,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오영철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장, 정광호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 여수산단 입주기업 관계자와 전남도 위기대응 TF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발표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과 지역민이 지혜를 모아 여수 석유화학산단이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문선 여수시장의 회장은 “여수국가산단의 생산활동 위축과 고용 불안정을

로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는 전기요금 인하, 산업위기 지역 지정 등 신속하게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창환 경제부지사는 “여수 석유화학산업은 도의 핵심 산업인 만큼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지자체와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 기자

**화순서 ‘전남 친환경 어울마당’ 성료**

“2024 전남 친환경 어울마당”이 13일 화순 하니움센터에서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의장, 구복규 화순군수, 정현구 무안부군수, 도의원, 시·군 친환경농업협회 회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고 전남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 속 전남산 친환경·유기농산물 수출을 확대할 것을 결의했다./양시원 기자

경철정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군 브로커**